

총장칼럼

‘소규모 대학’의 불편한 진실

강우정 | 한국성서대학교 총장



대학 총장들의 어떤 모임에서 한 대학 총장이 대학이 왜 이 지경인가? 라는 자성의 질문을 던진 후 스스로 그것은 1996년 제정된 준칙주의에 따라 대학이 무분별하게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뒤통수가 간지러웠다.

“이거 우리 대학 얘기야?”

“우린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목숨이었다 이거지?”

우리 대학이 바로 준칙주의에 따라 생긴 대학이다. 1952년에 설립되었지만 오랜 세월 학력인정을 받는 각종 학교로 있다가 1996년 대학설립기준이 완화되고 그 덕에 ‘대학교’ 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게 되었고 ‘교장’이 ‘총장’이 되는 영예도 누렸다. 완행열차의 맨 뒷칸에 겨우 올라타기는 했지만 우리는 대학 인가를 받기 위해 원칙과 순리에 따라 오랜 세월을 기다려 왔다는 자부심이 있었다.

준칙주의에 의해 생겨난 대학들 중에는 다소 부족한 대학도 있겠지만 이들이 오늘날 대학 문제의 주범이라는 인식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우선 규모 상 문제를 일으킬 만한 사이즈가 아니다. 준칙주의 이후 생겨난 4년제 대학은 38개교

이다. 숫자로는 우리나라 4년제 대학의 약 20%를 차지하지만 입학정원은 4%(총 정원 34만여 명 가운데 준칙주의에 의해 설립된 대학 1만 4,000명 미만)에 불과한 실정이다. 대학의 입학정원이 과도하게 늘어난 것이 문제라면 기존 대학들이 입학정원 자율화(1996년)를 계기로 정원을 턱없이 늘렸기 때문이다. 1996년 이후 대학입학정원은 9만 5,000여 명이 늘었다. 그 중 준칙주의 대학 증원인원은 4,000여 명으로 4.6%에 불과하다. 따라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책을 강구한다면 소규모 대학을 겨냥해 봤자 별 소득이 없을 것이다. 그동안 무분별하게 늘어난 대규모, 중규모 대학들의 정원을 지역 형편과 수요에 맞게 조정해야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이러한 인식 외에도 소규모 대학의 어려움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특히 수도권에 있는 소규모 대학들은 김영삼 정부 시절 잠깐의 예외 말고는 지난 십수 년간 정원이 동결된 상태이다.(수도권정비계획법 7조1항) 자세히 들여다보면 동결된 것이 아니라 줄어두고 있다. 오래 전에는 대학 편입이 2, 3, 4학년 언제라도 여석만 있으면 총원할 수 있었지만 그 후 「고등교육법」에 의해 3학년에 한해 편입이 허용되었고

그나마 교수충원을 등 교육여건에 따라 여석을 다 채우지 못하게 되었다. 또 농어촌 청년들, 가난한 청년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각 대학에 일정 범위 안에서 정원 외 입학 을 허용하는 제도마저 제한되어 규모의 경제를 구현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수도권에 있는 대규모 대학들이 학생들을 빨아들이는 것을 방지할 수는 없다손 치더라도 소규모 대학, 그 중에서도 모든 교육여건을 갖춘 대학까지 왜소한 상태로 묶어 둔다는 것은 획일적인 정책의 경직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소규모 대학은 기부금 확보도 어렵다. 사립대학이 받는 기부금 약 4,000억 가운데 약 50%를 10여개 대학이 받고 있다는 소식이다. 대학더러 자구노력을 하라고 하고, 또 학생 1인당 기부금 액수를 학교 평가의 지표로 삼는 마당이 지만 그동안 반값등록금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대학의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여서 기부금 모금은 오히려 더 어렵게 되었다. 이에 대학이 우리나라가 오늘날과 같은 선진국대열에 들어설 수 있도록 국가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해왔다는 국민적 인식과 더불어 정치현금과 같이 대학에 내는 기부금도 1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해주는 법 개정 등 대학이 자구적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진작하는 것도 절실하다.

소규모 대학의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고 대학에 특정 사안에 대해 전담직원을 의무적으로 두라는 획일적 요구도 문제다.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한숨이 다 나온다. 입시사정관 제도를 도입하고 싶어도 전담직원이 있어야 한다는 말에 언감생심 지레 물러나게 마련이다. 하기가 소규모 대학은 어차피 전 직원이 '입시사정(事情)관'이기는 하지만…….

소규모 대학 중 많은 대학이 종교계 대학들이다. 아니 종교지도자들 - 목사, 스님, 신부 등 - 을 양성하는 대학들은 대부분 소규모 대학들이다. 이들이 그동안 잘했던 못했던 국민들의 종교적인 삶을 보살피며 정신적(영적) 영역을 담당해 왔다는 사실은 결코 의미가 적은 일은 아닐 것이다. 요즘은 인성교육의 부재를 한탄하는 목소리가 많이 들린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 일반 대학이 산업화의 과정에서 우수한 인력을 양성, 공급함으로써 오늘날 한국이 경제 대국의 위치를 차지하는 데 절대적으로 기여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이 사회의 다른 한 축 다시 말해 정신적인 면을 지탱해온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을 양성해온 소규모 대학들의 공(功)도 과소평가 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그들의 리더십이 있었기에 그나마 우리 사회가 이 정도의 체운을 유지하며 사람이 사는 사회를 이루고 있다고 감히 말하고 싶다.

안철수 교수가 대통령 후보 때 자신의 '경제 민주화' 구상을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다. 한국 경제의 문제는 그동안 정부 주도, 대기업 주도, 제조업 중심이었다. 경제민주화의 방안은 이를 민간 주도, 중소기업과의 상생, 창의적인 지식산업의 주도로 바꾸어야 한다고……. 이러한 사고의 프레임은 교육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대학은 대학이 주도하도록 하고, 대학정책도 대규모 일반도가 아닌 모든 대학을 골고루 보살피는 유연성 있는 정책, 지식교육보다는 인성교육 중심의 교육으로 변화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고려대학교 법학과, (미)캘리포니아주립대 국제정치학 석사와 (미)워싱턴침례신학대학원 명예 인문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조선일보 기자, 한국일보 샌프란시스코 발행인, 한국복음주의학원 이사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감사, 사립대학총장협의회 부회장에 재직 중이다.
